

동맹정책에 대한 중국 학계의 인식담론 고찰

홍은정*

| 목 차 |

I. 서론	인식담론
II. 동맹정책 지지에 대한 중국의 인식담론	IV. 준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담론
III. 비동맹원칙 유지에 대한 중국의	V. 결론

| 논문요약 |

비동맹원칙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외교방침으로, 현재까지 비동맹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변화는 없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따른 변화된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제관계 영역 전문가들의 동맹정책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정책에 대한 담론을 동맹, 비동맹, 준동맹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 과정에서 기존 비동맹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동맹정책의 수용을 주장하는 동맹담론, 이와 달리 비동맹원칙의 유효성을 밝히는 비동맹담론, 그리고 동맹정책과 비동맹정책의 양자 사이에서 준동맹 개념을 제시하며, 현재 중국이 직면한 외교현실과 연계한 전략적 사고로서의 준동맹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동맹담론은 논자에 따라 개념과 분석틀을 달리하며 동맹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면서 동맹담론의 전개를 확대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맹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중국정부의 비동맹원칙의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적 조정의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더라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전개되는 동맹담론에는 중국외교가 직면한 국제 상황에 따른

*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외교적 고민 등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전문가들의 전략 사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주제어: 중국의 부상, 중국 비동맹정책, 동맹, 준동맹, 동반자 관계

I. 서론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적 상태라고 규정한다. 이 무정부적 상태에서 국가들의 생존은 보장될 수 없으며,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세력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는 자국의 힘을 키움으로써 자국의 생존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국가는 내부적으로 군사력 증강과 같은 자강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동맹의 결성 등의 방식을 통해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는 세계적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8,082억 3,000만 위안으로 책정되었으며(『연합뉴스』, 2014/03/05),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내부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힘을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는 동맹의 결성에 대해 중국은 과거 어떤 전략을 취해왔고, 현재는 어떠한 인식과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 외교는 여러 차례 중요한 변화과정을 겪었다. 50년대 중국의 외교는 소련 일변도(一邊倒) 외교였는데,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결성을 통해 당시 중소의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중소 동맹관계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50년대 말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중소관계는 60년대 관계악화로 치달았고, 결국 1969년 3월 중국은 전바오다오(珍宝島)에서 소련과 대규모의 군사충돌을 경험하였다. 70년대 초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마오쩌둥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의 선(一條線) 외교 전략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나섰고,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전략은 오히려 중국과 소련

을 그들의 아시아 국가의 동맹과의 관계에 긴장의 대치상태에 처하게 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의 주변 환경과 중국 국내의 현대화 건설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홍정표·장즈룽 2011, 99).

1980년대 들어 중국은 70년대의 하나의 선 전략을 대신하여 비동맹원칙의 외교노선을 표명하였다. 80년대 들어 중국은 국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천하는 데 반드시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미소 간 세력균형이 형성된 당시의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은 비동맹원칙을 제시하며 어느 일방과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였다. 미소 어느 한 국가와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미소 간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국제환경 유지에 불리하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었다(조영남 2009, 9). 이후 90년대 탈냉전 시기에 들어 중국은 신안보관을 새로운 외교방침으로 국가의 안보를 관리하고, 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공식적으로 비동맹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이 중국의 외교 변화과정은 동맹정책의 모색, 운용 그리고 그 조정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이 맺어온 소련, 미국 등 대국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동맹정책의 변화과정은 이들 국가와의 적대 및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냉전시기 중소 갈등, 중미관계 완화 등 국제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국관계는 중국의 동맹정책의 변화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의 동맹정책은 중국의 외교변화뿐 아니라, 주요대국의 역학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바, 국제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부상¹⁾ 이후 변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 국제관계 영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비동맹원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며, 동맹정책의 수용을 제기하는 등 동맹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90년대 말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일부의 학자들이 비동맹원칙을 비판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 이후 전개되는 동맹정책을 둘러싼 논

1) 중국의 부상시기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를 중국의 부상시기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의는 단순한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비동맹과 동맹정책을 둘러싸고 상호 비판적 견지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준동맹의 새로운 개념이 제기되는 등의 흐름을 보여주며 하나의 외교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이익이 확대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동맹정책이라는 대안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합세하여 논의를 확장하는 양상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중국의 외교과정을 동맹정치 의 모색과 운용 및 조정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중국의 국제관계 영역의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맹담론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장펑(張鋒 2012) 교수의 ‘동맹에 대한 중국의 신사고(China’s New Thinking on Alliances)’가 있다. 논문에서 장펑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에서 전개되는 동맹정책 논자들의 견해를 자세히 소개한 뒤, 동맹담론이 출현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 이론적 논의와 현실 분석을 적절히 활용하여 동맹담론을 조명한 데에서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장 교수의 연구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장 교수는 동맹정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맹담론을 조명하고 있다. 동맹담론을 이루는 여러 주장 가운데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해석하거나 강조할 경우,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동맹담론의 전체흐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의 비동맹원칙 견지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과 별개로, 중국이 실제 동맹외교를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 장 교수는 중국의 공식입장과 같이 중국이 비동맹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는 출발점에서 향후 중국이 동맹정책을 수용할 것인가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동맹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국가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중국에서 전개되는 동맹담론을 동맹정책의 전환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장 교수는 중국 국제관계 학계의 스펙트럼 변화를 정책변화와 동일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연성은 높지만, 반드시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²⁾

2) 중국 내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담론이 중국의 외교정책에 실제 어느 정도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현재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동맹담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맹담론을 이루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상호 비판적 시각에서 전개되는 담론이라면 각 주장의 핵심논리는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가? 이러한 동맹담론의 전개과정에서 어떠한 담론적 특징이 나타나는가? 또 현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비동맹원칙과 동맹담론을 어떠한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지식인들이 전개하는 담론을 동맹, 비동맹, 준동맹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각의 담론주체가 전개하는 담론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논리구조로 운용되어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동맹담론의 전개과정에서 살피지는 몇 가지 논의점을 제기하고, 동맹담론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과 함께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동맹담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나아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동맹정치를 이해하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II. 동맹정책 지지에 대한 중국의 인식담론

중국의 부상 이후 기존 비동맹원칙 외교노선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동맹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인 옌쉐통(閻學通) 교수이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동맹정책을 주장하는 수 편의 논문³⁾을 발표하며 중국의 동맹정책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로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동맹정책 주

영향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폐쇄적인 외교결정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국의 외교현실에서 평가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중국 전문가들의 위상과 영향력의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문제이다. 자칫 중국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담론 자체를 중국의 실제 외교노선의 변화의 흐름과 동일시하는 오독의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 중국 전문가들이 외교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한 논문으로 陳广猛(2010, 88-100), 郝雨凡、林魁 主編(2007, 151-169)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음.

3) 동맹정책을 주장하는 옌쉐통 교수의 논문 및 저작은 『國際經濟評論』(2012), 『歷史的慣性-未來十年的中國与世界』(2013) 외 다수를 참고할 수 있음.

장의 핵심논리도 현실주의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옌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훨씬 못 미치는 영향력을 지녔던 과거⁴⁾와 달리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즈음하여 급속하게 영향력을 키웠고, 2010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현 국제질서는 소위 G2로 불리는 미중 양극질서로 재편되었다는 세력균형의 시각을 과감하게 표출한다(『國際先驅導報』, 2011/05/31).

옌 교수는 미중 양극 질서의 형성은 중국이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동맹결성으로 힘을 모아 양극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비동맹정책을 포기함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 동맹정책의 전환으로 중국은 양극체제의 한 극을 담당하는 초강대국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본다. 옌 교수는 만약 한 극을 담당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안정보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들 주변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축으로 기울게 되며,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전략에 크나큰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중국에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國防時報』, 2011/06/08).

상해 복단대학의 탕스핑(唐世平 2010) 교수는 ‘동맹정치와 중국의 안보 전략(聯盟政治與中國安全戰略)’을 발표하여 동맹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⁵⁾ 논문에서 탕 교수는 동맹정책의 정당성을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이 아닌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에서 찾고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탕 교수는 동맹을 공세적 동맹과 방어적 동맹으로 나누고, 공세적 동맹은 대외 확장 및 정복에 목적이 있는 반면, 방어적 동맹은 잠재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방어적 동맹은 국가 간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간 안보를 증대하는 최선책이 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탕 교수는 중국은 신중국 건립 이후 현재까지 방어적 동맹을 실현해 온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동맹정치를 꾸준히 실천해 온 국가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탕 교수는 중국이 비동맹원칙의 견지에서 동맹정책으로

4) 옌쉐통 교수(2006, 5-33)는 자신의 저작에서 중국의 권력지위를 다른 강대국들보다 강하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 탕스핑 교수의 동맹정책에 관한 발전된 논의는 『當代亞太』(2013)를 참고할 수 있음.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펴며, 중국 동맹정치 본연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탕스핑 2010, 25-37).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동맹논의를 전개하는 탕 교수와 달리 장원무(張文木 2012) 교수는 기존 비동맹원칙에 대한 학계의 해석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 동맹정책의 정당성을 이어나간다. 장 교수는 중국은 1950년대부터 자주독립(獨立自主) 외교노선을 실천해 왔을 뿐이며, 비동맹정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장 교수는 중국은 1961년 인도의 네루,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등이 주도한 비동맹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이 비동맹원칙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소련 및 미국과의 동맹을 맺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당시의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이 자주독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책략이었다고 해석한다. 즉 장 교수는 비동맹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비동맹정책을 자주독립의 외교노선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장원무 2012, 84-87).

한편, 우취(吳旭) 교수는 비동맹원칙의 외교방침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게 유연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고, 중국의 국가이익이 확대된 현재의 국제환경 속에서 비동맹원칙은 중국의 안보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의 존재로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종종 고립되는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하고, 자국의 이익이 미치는 외교문제에서 비동맹정책을 견지하는 것은 외교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외교노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中國新聞周刊』, 2012/01/10). 중국인민대학의 스인홍(時殷弘) 교수도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중국은 친구가 부족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외교가 반드시 기존 외교원칙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며, 향후 중국이 동맹을 맺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을 언급하고 있다.⁶⁾

6) 스인홍 교수의 동맹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2012년 2월 5일 홍콩평화TV에서 방송된 내용을 참고할 것. “中國國際戰略機遇走向,” <http://www.56.com/redian/NTg2NzU0/NjYxNTcwODY.html>. (2013년 5월 9일 검색); 스인홍 교수는 동맹결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엔쉐통 교수가 동맹정책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제질서

이들처럼, 동맹정책을 주장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은 중국이 직면한 외교환경에 비동맹원칙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파트너인 미국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이 전통적 ‘군사동맹’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環球時報』, 2012/01/30).

하지만, 대부분의 동맹정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취할 동맹은 서구의 군사동맹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중국이 취해야 할 동맹정책은 안보협력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군사동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동맹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경대학 왕이저우(王逸舟) 교수는 2013년 펴낸 『창조적 개입(創造性介入)』에서 중국은 어떠한 국가 및 집단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기본전제하에 동맹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가운데, 전통적 군사동맹을 협의(狹義)의 동맹으로, 국가이익을 기초로 한 동맹을 광의(廣義)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후자의 동맹관계를 중국의 전략으로 활용할 시기라고 주장한다(왕이저우 2013, 107-108). 우쉬 교수는 동맹이란 동맹을 맺지 않은 국가와도 대립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는 가운데,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관계로, 중국이 취할 동맹은 안보협력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킨 국가관계라고 정의내리고 있다(『中國新聞周刊』, 2012/01/10). 경신(庚欣) 교수는 새로운 시기에 걸맞은 동맹은 과거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일종의 협력방식을 말하며, 그 예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G20회담을 제시하며, 현 국제체제에 알맞은 동맹의 형태라고 설명한다(『環球時報』, 2010/06/08). 반면 군사평론가인 송충핑(宋忠平 2013)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경제동맹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존의 동맹개념을 경제동맹, 정치동맹, 군사동맹 등 새로운 개념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며, 중국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개념의 동맹으로 미국의 위협에 대

의 미중 양극체제 재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에, 미국양극 질서재편을 전제로 한 동맹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설명한다. “時殷弘：中國對外政策應與時俱進調整,” http://news.ifm.inland/detail_2012_07/09/15879807_0.shtml. (2013년 5월 9일 검색)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⁷⁾

그렇다면 중국이 동맹정책으로 선회할 때, 동맹의 상대국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 각자의 개별적 주장을 펴고 있지만, 동맹상대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국가는 러시아이다. 대다수 동맹정책의 수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러시아와의 동맹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러 간 동맹의 필연성과 그 가능성을 부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러시아와의 동맹을 주장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環球時報』, 2012/03/27). 이들은 중러동맹의 출현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국제체제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세계적 차원의 미중 간 갈등, 지역차원의 중일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국제환경에서 중국과 전략이익이 유사한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人民論壇』, 2013/06/07). 중러동맹 결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엔쉐통 교수는 동맹의 목적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있기 때문에 중러동맹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운 중러 간 신뢰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엔쉐통 2012, 21-23). 엔 교수는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개발을 경계하지만, 동맹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었지만,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러 간 신뢰부족보다 양국의 공동이익 창출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하며 중러동맹의 결성을 촉구하고 있다. 장원무(張文木) 교수는 중러 간 동맹결성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재현을 막는 알타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 극동지역의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러 양국의 관계가 공고화되면 국가이익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장원무 2012, 85-86).

러시아 외에도 다른 국가나 기구를 동맹대상국으로 고려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쉬 교수는 상하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를 주장

7) 쑹충핑의 주장은 2013년 4월 13일 홍콩평화TV에서 방송된 내용을 참고할 것. “中俄聯手能否抗衡美日聯盟,” <http://phtv.ifeng.com/program/yhyxt>. (2013년 5월 10일 검색)

한다. 우 교수는 상하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등을 동맹국으로 확장시켜 유라시아의 안보협력체계를 형성하면, 공격 및 방어의 안보동맹체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무역 등의 안보도 보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동맹이 형성된다는 견해이다(『中國新聞周刊』, 2012/01/10). 엔쉐통 교수도 러시아 동맹뿐 아니라, 상하이협력기구를 포함한 5개국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북한 등 중국의 주변 12개국을 중국의 잠재적인 동맹대상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중국의 동맹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특히 미얀마와 북한의 경우 최근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비슷한 경로의 개혁개방의 노선이라고 평가하며, 이들 국가는 중국의 성실한 동맹국이 되는데 적합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⁸⁾ 한편, 다른 동맹논자와 달리 의외의 주장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리진창(李金強)은 동맹상대국으로 일본과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체계 형성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원하는 세 국가의 동맹결성은 지역의 공동안보에 절대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聯合早報』, 2010/07/21).

8) 엔쉐통 교수의 주장은 2012년 7월 9일 홍콩평화TV에서 방송된 내용을 참고할 것. “中國周邊有12國爲潛在結盟對象,” http://news.ifeng.com/mainland/detail_2012_07/09/15880906_0.shtml. (2014년 3월 25일 검색); 엔쉐통 교수의 동맹정책에 관한 논의는 시기에 따라 확대 발전되고 있다. 동맹의 필요성만을 역설한 초반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의 논의(2013)에서는 동맹정책의 실천성을 담보한 동맹의 형식문제, 동맹대상국의 제시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는 한국 및 태국과도 정치동맹 및 준동맹 수준의 동맹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동맹정책 수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엔쉐통 교수는 그가 속한 청화학파를 통해 동맹담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맹정책과 관련한 학술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엔 교수의 제자들도 동맹에 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Ⅲ. 비동맹원칙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인식담론

비동맹원칙의 유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동맹정책으로의 전환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동맹정책의 제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현명한 외교전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들에게 비동맹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대화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 평화적으로 부상 중인 중국에게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大公報』, 2012/06/14).

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비동맹정책을 적시한 정부의 공식문건을 통해 비동맹원칙의 견지를 꾸준히 천명해 왔다.⁹⁾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자의 공식선언이나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동맹정책은 냉전의 산물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비동맹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장쩌민 주석은 1999년 제네바에서 열린 감축문제와 관련한 회의석상에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군비 증가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낡은 안보관이며, 이는 국제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구축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人民日報』, 1999/3/27)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04년 5월, 원자바오 총리는 평화공존 5원칙 창립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역사가 증명하듯,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군비증강은 낡은 안보관이며, 이는 국제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략)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하며, 상호 신뢰, 이익, 협력을 핵심으로 한 신안보관을 공고히 하며, 대화로 안보를 추구하고, 협력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人民日報』, 2004/06/29)고 말했다. 현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주석도 동맹과 관련하여 공식석상에서 장쩌민, 원자바오 등 이전 지도자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¹⁰⁾ 또한 2011년 9월 중국 정부는 『중

9) 비동맹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공식문건은 1986년, 1987년, 1988년, 1996년 정부업무보고서와 1992년과 1997년 당대회보고서(링성리 2012, 120)이다.

10) 시진핑 주석의 동맹에 관한 언급은 다음을 참고할 것. “習近平: 寬廣的太平洋有足夠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 『中國新聞網』, 2012年 2月 13日, <http://www.chinanews.com/gn/2012/02-13/3665577.shtml>. (2013년 5월 10일 검색)

『국평화발전』 백서를 통해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에서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어떤 나라 및 기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으며,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다름이 국가관계의 친소(親疏)를 결정짓지 않는다.”¹¹⁾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탈냉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동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군사동맹으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해 왔다. 비동맹원칙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같은 선상에서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 국방대학의 리다광(李大光) 교수는 냉전시기 중소동맹의 반성으로 출발한 비동맹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중국의 주변국가와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스스로가 표명해 온 입장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環球時報』, 2012/02/27). 중국 외교학원의 링성리(凌勝利) 박사는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가는 탈냉전 시대의 다극체제에서 테러분자, 해적 등과 같은 비국가적 안보 위협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냉전시기의 군사동맹은 비효율적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하며 비동맹원칙의 견지가 현재의 국가이익에 최적이라고 주장한다(링성리 2012, 125).

설령 동맹정책의 실천문제를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평가한다고 하여도, 미국의 대결을 상정한 동맹관계 구축은 중국적으로 중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현실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비동맹원칙을 포기하고, 주변국들과 군사동맹을 맺어나가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미중관계를 냉전시기의 양극체제의 대립관계로 생각하고, 중국이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대신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이는 냉전의 도래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어 중국의 부상에 유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廣外新聞網』, 2011/12/23). 오히려 미중 간의 우호협력으로 얻을 이익이 훨씬 크며, 미중 양국은 경제,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 충돌적인 상황을 막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11) 『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 人民網, 2011年 9月 6日,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15598619.html>. (2013년 5월 10일 검색)

의 주펑(朱鋒) 교수는 중미관계를 대립과 적대관계가 아닌 협력관계 혹은 협력과 경쟁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규정짓고, 비동맹정책의 견지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의 외교환경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 교수는 설령 중미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때의 경쟁관계의 성질은 미소 냉전시대의 대결과 대항과는 같은 성질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립과 경쟁의 관계에 기초한 냉전적 사고로 비동맹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 국제정세를 오판하는 전략적 사고라고 단언한다(『環球時報』, 2012/06/08). 차오신성(喬新生) 교수는 중국의 부상 이후 일부 군사전문가와 학자들이 중국이 고립되었다고 과장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적과 야군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냉전적 사고라고 평가한다. 차오 교수는 비동맹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중국에게 감히 전면전을 벌일 국가는 없으며, 나아가 중국이 비동맹원칙을 견지해야만 중국적으로 경제정치대국이 되어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環球時報』, 2011/05/28).

동맹정책의 담론에서 동맹상대국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맹논자들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한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국제정세에서 공동이익을 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일 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결성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설명한다(우싱탕 2012, 52-53).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중러목련우호협력조약(中俄睦鄰友好合作條約)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호관계는 제3국에 대항하지 않는 관계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맹관계가 아닌 우호협력관계로서의 중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중러관계는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아울러, 중러 동맹결성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서 중러 사이에 체결된 세 번의 동맹조약¹³⁾은 실질적으로 중국

12) “中俄睦鄰友好合作條約,”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8/21/content_532202.htm. (2013년 5월 9일 검색)

13)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세 차례의 동맹조약은 각각 1896년에 체결된 중러밀약(中俄密約), 1945년에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中蘇友好同盟條約)과 1950년에 체결된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이다.

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추하이옌 2013, 34-41). 쑨시후이(孫西輝)는 중러 간 영토에 대한 야욕, 경제력 차이, 양국 간 여론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중러 간 동맹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낸다(쑨시후이 2014, 85). 이들은 중러 양국의 협력은 양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종합적 고려에 의한 결과로서, 중국에게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외교공간을 마련해 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중러 양국에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결론짓고 있다(『人民論壇』, 2013/06/07).

한편, 비동맹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역사적 맥락이나 단편적인 국제정세의 판단에 국한시키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전략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지식인도 있다. 이들은 비동맹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적인 외교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環球時報』, 2010/06/08; 쑨시후이 2014, 84-85). 일단 다른 나라와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중국의 외교는 동맹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국한될 뿐 아니라, 오히려 동맹국 간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비동맹원칙은 동맹이라는 협소한 외교관계에서 탈피하여 중국 외교를 전방위(全方位) 외교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중국은 탈냉전 이후 세계대국뿐 아니라 각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동반자관계(伙伴關係)를 통한 전방위 외교를 구현해 오고 있다. 동반자관계는 동맹이나 안보 조약 등과 달리 당사국 간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외교관계에 있어 융통성을 갖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패권국가인 미국과 같은 방식인 동맹체제로 대응하기보다는 비동맹원칙을 전제로 세계 여러 나라와 동반자관계를 통해 외교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미국의 동맹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주변국에게 미국과 패권싸움을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¹⁴⁾ 이런 측면에서 비동맹원칙의 견지를 주장하는

14) 중국이 맺고 있는 전략 동반자관계 가운데, 중국은 8개국과 안보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러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비동맹원칙 견지를 펴는 지식인들은 중국이 이들 국가와 맺은 조약 가운데 동맹적 성질을 포함하는 안보협력에 대해 동맹으로의 해석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링성리(2012, 123)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동맹정책을 택하지 않고도 현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부상을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기제가 존재함을 꼽고 있다. 이들은 상하이협력기구, 아세안, 아세안 10+1, 아세안 10+3 등의 다자협력을 통해서 비동맹원칙의 기조에 배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위협하는 요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環球時報』, 2010/06/08).

중국이 동맹정책을 실천한다고 해도 동맹 상대국이 실제로 중국과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상해 복단대학의 자오화성(趙華勝) 교수는 중러동맹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동맹을 원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오 교수는 2013년 2월 러시아에서 발표된 ‘러시아대외정책개념’ 문서에서 “현 시기에 전통적 군사정치동맹은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할 수 없으며, 현재의 도전과 위협은 국가를 초월한 것으로 다양한 다자기구에 참여하는 그물망(網狀) 외교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러시아가 중국과의 동맹결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러시아 학계의 주된 시각을 소개하며 대다수 러시아 학자들도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선호하더라도, 중국과의 동맹결성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人民論壇』, 2013/06/07). 중국 사회과학원 장이(姜毅) 연구원은 일부 동맹논자들이 동맹의 대상으로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 모두 자국의 독립적 외교정책을 펴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⁵⁾ 그는 상하이협력기구의 헌장에 제3국에 대한 동맹을 결성하지 않음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미 일정 정도의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동맹논의의 확대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북경대학의 주평 교수는 동맹정책의 전제는 한 국가가 동맹을 맺고 싶다, 아니다(想不想)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 교수는 동맹정책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한 지역강국이나 대국이 긴밀한 조약의무의

15) 장이 연구원의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견해는 2011년 6월 15일 홍콩평화TV에서 방송된 내용을 참고할 것. “上合組織不會成爲軍事同盟組織,” http://news.ifeng.com/world/detail_2011_028819_0.shtml. (2014년 4월 25일 검색)

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지역의 역량을 바꾸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중국과 동맹을 원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미, 중일 간의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없다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環球時報』 2012/06/08). 같은 맥락에서 중국 외교학원 링성리 박사는 중국이 동맹을 취한다면 현재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 맞설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하며, 그렇지 못한 중국의 외교상황을 지적하고 있다(링성리 2012, 52-53). 이런 견해를 취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맹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의 동맹상대국이 될 수 있는 북한, 이란, 파키스탄, 쿠바 등의 국가들을 평가하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 대응하기에 질적으로 열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⁶⁾ 결국 비동맹원칙의 견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실제 외교현실에서 동맹형성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적당한 동맹정책의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중국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비동맹원칙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IV. 준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담론

비동맹정책의 견지에 대한 담론과 동맹정책의 수용을 주장하는 담론이 상호비판적 측면에서 전개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준동맹(准結盟)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사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에서 준동맹의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던 시기는 90년대 말이었다. 탈냉전의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일부 학자들은 비동맹정책이 중국이 처한 국제정세에 적절한 외교방침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동맹의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¹⁷⁾ 이들이 준동맹 개념

16) “中國爲何不結盟, 何時才會結盟?” <http://military.china.com/critical3/27/20110810/16697574.html>. (2014년 3월 27일 검색)

17) 90년 말 당시 제기된 준동맹 주장에 대한 중국 학계의 비판적 견해는 張博文(2000), 李廣義·石左(1999), 沈驥如(2001)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음.

을 제기한 것은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냉전시기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90년대 코소보 전쟁 등과 같은 국제정세 등의 변화 속에서 나토의 확장과 미일동맹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붕괴 이후 등장한 러시아의 상대적 힘의 쇠락, 미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세력 우위 등과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당시의 이러한 국제정세가 독립자주의 교의 실천인 비동맹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비동맹원칙의 견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예즈청 2000, 7-8).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국의 부상과 함께 나타나는 동맹담론에서 준동맹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말 제기되었던 준동맹 논의와 유사한 논리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준동맹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비동맹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동맹정책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비동맹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동맹정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는 달리 동맹형성의 불충분한 조건, 예를 들어 동맹형성의 적합한 시기, 동맹대상국에 대한 고려, 국가이익에 기초한 조건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环球時報』, 2010/07/18; 쑨더강 2012, 57-81; 위정량 2012, 95-101).

이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맹담론 전개 과정에서 동맹정책과 차별되는 준동맹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외교적 실천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0년대 말 준동맹이 제시되던 당시가 비동맹원칙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비판적 사고에 그쳤다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준동맹 논의는 외교실천의 구체성을 담보한 논의의 확장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준동맹 정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준동맹 개념과 준동맹 외교의 실천형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준동맹 담론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

준동맹 정책의 논리를 펴는 왕하이윈(王海運 2012)은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는 현 국제질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평가한다. 왕은 이러한 국제질서는 중국외교의 고립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맹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동맹정책을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동맹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기 및 이에 따른 철저한 국가이익의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하이윈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판단에 기초하여 비동맹정책에서 동맹정책으로 가는 과도기적 정책을 ‘준동맹’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준동맹 전략을 세 가지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 조건은 중국이 삼불정책(三不政策)¹⁸⁾의 유지를 선언하고, 일정 기간 내에 군사동맹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비동맹에서 동맹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동맹대상국의 관계에서도 마찰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삼대지역(三帶地域)의 형성을 통해 동맹형성을 위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선린우호지역(睦鄰友好帶), 전략완충지역(戰略穩定帶), 경제협력지역(經濟合作帶) 등의 세 가지 지역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셋째로 주변국에게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며,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증대시켜 동맹형성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조건이다. 왕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준동맹 조건을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체제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環球時報』, 2010/07/18).

2012년 ‘새로운 시기 중국의 준동맹외교(論新時期中國的准聯盟外交)’의 논문을 발표한 복단대학의 쑤더강(孫德剛) 박사는 중국외교의 현실에 준동맹을 창조적으로 적용해 중국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쑤더강은 국제관계를 동맹관계, 준동맹관계, 동반자관계, 보통국가관계, 잠재적 대립관계, 군사충돌 및 적대관계 등 6개 층위로 나누고, 준동맹관계를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의 중간단계로 설명한다. 그는 준동맹 외교의 개념을 비공식적 안보협력으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국제조직이나 기구의 비공식 안보협력기제로, 안보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동맹의 연루와 포기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쑤더강은 동맹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준동맹 외교행태를 제시하고 있다.

18) 삼불정책(三不政策)은 제3국과 동맹을 맺지 않으며(不結盟), 제3국에 대항하거나(不對抗),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음(不針對)을 뜻한다.

첫 번째 준동맹은 다변조직형(多邊組織型)으로 상하이협력기구에 포함한 국가들과의 준동맹 외교를 실현하는 형태이다. 쑨더강은 상하이협력기구를 이루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 두 대국을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한편, 주변 이슬람 국가의 완충지역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인도 간 완충작용에 주목하며, 중국의 준동맹 외교실천의 주요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신흥합작형(新型合作型)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신흥대국과의 준동맹 외교형태이다. 신흥대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지역별 안보에서 중요한 전략요충지이다. 셋째는 전통우호형(傳統友好型) 외교형태로 중국의 전통우호국가와의 준동맹 외교를 실천하는 형태이다. 쑨더강이 규정한 전통우호국가란 파키스탄, 미얀마, 수단, 태국, 북한 등 5개국으로 중국은 이들 국가와 지정학적으로 특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치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침체되어 있으며, 서방국가로부터 문제국가로 간주되지만,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안보 및 이익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국가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기초로 준동맹의 특수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쑨더강 2012, 57-81).

위정량(俞正樑)은 중국의 대전략을 논의하는 논문에서 중러 간 준동맹 결성을 통해 중국북쪽지역의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국의 잠재적 위협국가로 서방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러 양국이 이에 대응해 공동안보를 위한 준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러 양국의 준동맹 체결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전략적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위 연구원은 중러 간 준동맹은 군사동맹이 아닌, 국제안보협력의 한 형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위정량 2012, 95-101).

인쉬무(尹續武) 교수는 최근 중국 내에서 전개되는 동맹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군사동맹과 정치경제동맹을 혼용하여 사용한다고 지적한 뒤, 군사중심의 경성균형의 동맹체제는 방어적 국가인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변 안보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한다(『聯合早報』, 2010/07/29). 따라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군사중심의 경성균형의 동맹 개념에서 벗어나, 연성균형의 준동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는 중러관계, 동북아 안보구조, 중국과 아세안 협력 등 중국외교 현실을 평가하며, 향후 중국의 외교에서 연성균형의 준동맹체제 출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왕춘강(王存剛)과 양이(楊毅)는 안보중심의 동맹과 경제협력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이 비동맹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준동맹 수준의 협력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정치외교 및 경제적 평가에 기초한 가운데 그 실현방식을 탐색하고 있다(왕춘강 2012, 120-135; 양이 2011, 137-154).

이렇듯, 중국 내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준동맹 담론은 변화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중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조건(경제적 우위, 주변동맹국의 존재 등)을 감안한 가운데 동맹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준동맹 담론은 준동맹 개념을 논자마다 새롭게 정의한 가운데, 이를 중국 외교현실에 창조적으로 결부시켜 보려는 전략사고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맹정책을 둘러싼 중국 전문가들의 담론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중국의 국제관계 영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기존 외교노선인 비동맹원칙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동맹정책의 수용을 둘러싼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맹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우선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변화에 대응해 중국이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비동맹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며, 동맹을 맺는다면 동맹의 대상은 누구이며, 나아가 어떠한 동맹의 형태가 바람직한가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동맹담론은 비동맹원칙을 견지하자는 입장과 동맹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이 상호 비판

적인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전개되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비동맹과 동맹 주장의 상반된 양자의 입장과 인식 가운데 중국 외교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논의로서 준동맹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외교실현 형태를 제시하는 준동맹 논의도 동맹담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담론이 중국의 외교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이 동맹 담론들이 중국의 외교노선인 비동맹원칙의 변화여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맹담론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정부는 2011년 발간한 평화백서를 통해 “평화공존의 5원칙의 기초에서 중국은 어떠한 국가나 기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본문에서 기술했듯이 중국의 현 지도부 역시 미국을 위시한 동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비동맹원칙의 견지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와 견제를 고려해 자국의 부상이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의 화해 세계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며, 결코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문흥호 2011, 17). 따라서 중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의 비동맹원칙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동맹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평화적 부상에 대한 중국 스스로의 공식적 표명과 배치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의 전문가들이 꾸준히 전개하는 동맹담론이 중국의 비동맹원칙 외교노선의 변화 여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역학관계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점을 제기함으로써 동맹담론의 기능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정부의 비동맹원칙 견지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과 별개로, 중국이 실제 동맹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중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냉전기 중소동맹을 제외하고 꾸준히 비동맹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들이지만,¹⁹⁾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동맹정책의 정당성을

19) 중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기존연구의 첫 번째 관점은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은

주장하는 탕시핑과 장원무 교수 등은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은 방어적 차원에서 동맹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타즈하 폴 등의 학자가 제기한 연성균형의 개념이 매우 유효한데, 이들에 따르면 연성균형은 부상하는 또는 잠재적인 위협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대국 간에 형성하는 암묵적 비공격적 연합을 가리키며, 이를 위해 각국은 암묵적 이해 또는 공식적 동맹이 아닌 협약을 체결하거나, 국제제도를 이용하여 임시연합을 구성하여 위협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조영남 2009, 2-3 재인용).

이러한 연성균형의 개념을 차용해 중국의 동맹정책을 연구한 조영남(2009) 교수는 중국은 탈냉전기 이후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에서 말하는 경성균형²⁰⁾이 아니라 자국의 외교방침과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성균형을 추진해 왔다고 진단하고 향후 단기간 내에도 이러한 노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중국은 전통우호 수준의 북중동맹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간의 협력,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기초로 중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상하이협력기구 등의 다자안보기구, 아세안과의 협력 등을 통해 자국만의 연성균형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다(조영남 2009, 4-5). 따라서 중국을 연성균형의 동맹정책을 취해온 국가라고 평가한다면, 현재 중국의 국제관계 영역의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담론은 비동맹원칙 외교노선의 전환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게 된다. 오히려 연성균형의 동맹이 아닌 세력균형적 경성균형의 군사동맹으로의 외교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동맹담론의 기능 및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논자를 제외한 대다수 동맹논자들이 제시하는 동맹정책이 서구의 군사동맹과는 다른 개념의 동맹정책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전개되는 동맹담론은 중국이 이미 취

다른 대국과 마찬가지로 동맹외교를 전개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소련, 북한, 베트남, 알바니아, 파키스탄 등 동맹을 형성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동맹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주로 서구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중국은 냉전기 중소동맹을 제외하고 꾸준히 비동맹외교를 외교를 전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주로 중국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중국의 공식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20) 탈냉전기 중국 외교를 세력균형적 시각에서 분석한 논의는 Ross, Robert S.(2004)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음.

하고 있는 연성균형적 동맹정치외연의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맹담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군사원조를 기초로 체결한 조약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링성리 2010, 125 재인용). 그러나 중국에서 전개되는 동맹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 개인에 따라 동맹의 개념을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개념 등으로 임의적으로 확대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맹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동맹담론을 동맹, 비동맹, 준동맹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전개되는 실제 담론의 전개내용을 볼 때, 동맹과 준동맹의 논리가 매우 흡사한 논리 혹은 중복된 논리로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비동맹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외교적 실천의 내용을 동맹이나 준동맹 논자들이 유사하게 끌어다 자신의 주장에 대입하는 등 상호 주장 사이에 차이가 모호한 점도 발견된다. 이는 동맹정책과 비동맹정책 그리고 준동맹정책 사이에 엄밀한 차원의 상호 비판적 작용에 의한 논의확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동맹담론 자체가 학계 차원에서 이긴 하지만, 중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적 조정의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중국의 외교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향후 중국의 외교실현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준동맹 논의에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학계의 논의를 통해 대외관계에서 더욱 유연한 전략적 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중국의 연성균형적 동맹정치외연의 확대하는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논리로도 귀결될 수 있다.

한편, 비록 동맹담론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비동맹원칙의 외교노선 전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결부시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담론 자체는 중국이 자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대국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전략사고의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남사군도, 다오위다오 등 직면한 여러 외교문제에서 주변국

과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2010년과 2012년에 학계와 언론 등을 통해 동맹정책을 둘러싼 담론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담론의 표출은 중국이 변화하는 정세에 적극적인 전략적 사고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맹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전개에서 동맹상대국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러시아와의 최근 몇 년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주변 대국과의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러시아 푸틴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였고, 아시아 지역의 경쟁에 대항하기 위해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위정량 2012, 97).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과 아울러 중국 역시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 역시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였다. 당시 시진핑과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중러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경제, 통상,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분쟁, 이란 문제, 북한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국제문제에서 외교적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의 대응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중러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해 중국의 동맹논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뛰어넘어 안보상 이미 준동맹의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왕수춘·완칭쑹 2013, 27-30).

이와 같은 중러 간 관계심화는 동맹담론의 전개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동맹상대국으로서의 가능성 및 협력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로 표출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의 투영 외에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발전 방향,²¹⁾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의 관계, 지정학적 시각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대전략 문제 등도 동맹담론의 주요한 논의주제로 투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외교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결국 중국에서 전개되는 동맹담론은 실제 중국 정부의 비동맹

21) 2013년 7월 13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전면적 이익공동체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안보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7/14).

원칙의 전환 여부라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 기능을 찾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 외교가 직면한 국제상황에 따른 외교적 고민 등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대응을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이는 향후 동맹담론의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문흥호 (2011). “중국의 평화발전백서와 대외전략.” 『동아시아브리프』. 통권 22호, pp. 17.
- 조용남 (2009).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EAI국가안보패널(NSP) 보고서』, 32호, pp. 1-42.
- 홍정표·장즈롱 (2012). 『현대 중국외교론』. 서울: 나남,
“중국 왕이, 상하이협력기구 이익공동체 개편 역설.” 『연합뉴스』. 2013년 7월 14일.
- Feng Zhang (2012). “China’s New Thinking on Alliances.”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54. No 5, pp. 129-148.
- Ross, Robert S. (2004). “Bipolarity and Balancing in East Asia.” *In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ed.) T.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Yan Xuetong (2006). “The Rise of China and Its Power Statu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 No. 1, pp. 5-33.
- 邱海燕 (2013). “中蘇(俄)對抗和結盟的歷史啓示與兩國關係最佳模式的選擇.” 『俄羅斯學刊』. 第3卷. 第15期, pp. 34-41.
- 凌勝利 (2012). “中國可以結盟嗎?” 『國際瞭望』. 第1期, pp. 52-53.
- _____ (2012). “中國不結盟的原因探析—崛起中的安全戰略考量.” 『第五屆全國國際關係國際政治專業博士生學術論壇發表文章』. 10月, pp. 117-127.
- _____ (2012). “中國不結盟的原因探析—崛起中的安全戰略考量.” 『第五屆全國國際關係國際政治專業博士生學術論壇發表文章』. 10月, pp. 120, 123.
- 李廣義、石左 (1999). “不結盟政策需要重新審視嗎?” 『國際展望』. 第21期.
- 蘇若林、唐世平 (2013). “相互制約: 聯盟管理的核心機制.” 『當代亞太』. 第3期, pp. 5-38.
- 孫德剛 (2012). “論新時期中國的准聯盟外交.” 『世界經濟與政治』. 第3期, pp. 57-81.
- _____ (2012). “論新時期中國的准聯盟外交.” 『世界經濟與政治』. 第3期, pp. 57-81.
- 孫西輝 (2014). “不結盟的中國需要伙伴.” 新產經. 第2期, pp. 84-85.
- 楊毅 (2011). “安全聯盟與經濟合作研究—基於四種聯盟類型的分析.”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pp. 137-154.
- 閻學通 (2012). “俄羅斯可靠嗎?” 『國際經濟評論』. 第3期, pp. 21-25.
- _____ (2013). 『歷史的慣性—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 中信出版社.

- 吳興唐 (2012). “國際形勢動蕩多變下中國外交應堅持三不原則.” 『当代世界』. 4月, pp. 52-53.
- 王逸舟 (2013). 『創造性介入-中國之全球角色的生成』. 北京大學出版社.
- 王存剛 (2012). “論中國外交調整-基于經濟發展方式轉變的視角.” 『世界經濟與政治』. 第11期, pp. 120-135.
- 俞正樑 (2012). “關於中國大戰略的思考.”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第5期, pp. 95-101.
- 張文木 (2012). “中俄結盟的限度、目標和意義.” 『社會觀察』. 第3期, pp. 84-87.
- 張博文 (2000). “中國會放棄‘不結盟’政策嗎?” 『國際展望』. 第10期.
- 陳廣猛 (2010). “論思想庫對中國外交政策的影響.” 『外交評論』. 第1期, pp. 88-100.
- 沈驥如 (2001). “中國為什麼不結盟.” 『山西老年』. 第6期.
- 郝雨凡、林甦 主編 (2007). 『中國外交決策: 開放與多元的社會因素分析』.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151-169.
- 叶自成 (2000).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 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第1期, pp. 5-10.
- 庚欣 (2010). “專家稱國際形勢已變 中國應突破不結盟理念.” 『環球時報』. 6月8日.
- 喬新生 (2011). “中國是孤獨者 源自冷戰思維.” 『環球時報』. 5月28日.
- 戴旭 (2012). “中俄應構建歐亞大戰略.” 『環球時報』. 1月30日.
- 陶文釗 (2012). “中國應堅持‘不結盟’政策.” 『大公報』. 6月14日.
- 李金強 (2010). “對中國國際結盟路向的探索.” 『聯合早報』. 7月21日.
- 李大光 (2012). “不結盟不意味着不交友.” 『環球時報』. 2月27日.
- 聞一 (2012). “雖會吃大虧 但中俄聯手仍是時代最佳選擇.” 『環球時報』. 3月27日.
- 徐光裕 (2010). “放棄不結盟中國或被稱霸韜光養晦不過時.” 『環球時報』. 6月8日.
- 閻學通 (2011). “國際格局已出現兩極化而不是多極化趨勢.” 『國際先驅導報』. 5月31日.
- _____ (2011). “中國或可考慮改變‘不結盟’政策.” 『國防時報』. 6月8日.
- _____ (2013). “為什麼中國必須和俄羅斯結盟.” 『前瞻網』. 3月26日.
- 吳旭 (2012). “中國應放棄不結盟政策.” 『中國新聞周刊』. 1月10日.
- 王海運 (2012). “中國要創造結盟條件, 中俄結盟勢在必行.” 『環球時報』. 7月18日.
- 尹續武 (2010). “中國需要什么樣的聯盟外交.” 『聯合早報』. 7月29日.
- 庄典初 (2011). “中國不會結束‘不結盟’政策, 與閻學通先生商榷.” 『廣外新聞網』. 12月23日.
- 趙華勝 (2013). “中俄結盟”為何缺乏現實可行性.” 『人民論壇』. 6月7日.
- 朱鋒 (2012). “大國不願與中國結盟 新冷戰屬戰略性愚蠢.” 『環球時報』. 6月8日.

- “在日內瓦載軍談判會議上江主席發表講話受到熱烈歡迎。”『人民日報』, 1999年 3月 27日.
- “弘揚五項原則促進和平發展。”『人民日報』, 2004年 6月 29日.
- 唐世平 (2010). “聯盟政治與中國安全戰略.” http://www.21ccom.net/articles/qqswwj/article_2010113025525.html. (2013년 5월 10일 검색)
- 王樹春、万青松 (2013). “論新型中俄關係的未來走向：結伴還是結盟.” http://www.cssn.cn/zxx/gjzxx_zxx/201401/t20140126_954118.shtml. (2014년 3월 25일 검색)
- “習近平：寬廣的太平洋有足夠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 <http://www.chinanews.com/gn/2012/02-13/3665577.shtml>. (2013년 5월 10일 검색)
- 『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15598619.html>. (2013년 5월 9일 검색)
- “中國國際戰略機遇走向.” <http://www.56.com/redian/NTg2NzU0/NjYxNTcwODY.html>. (2013년 5월 9일 검색)
- “時殷弘：中國對外政策應與時俱進調整.” http://news.ifeng.com/mainland/detail_2012_07/09/15879807_0.shtml. (2013년 5월 9일 검색)
- “中俄聯手能否抗衡美日聯盟.” <http://phtv.ifeng.com/program/yhyxt>. (2013년 5월 10일 검색)
- “中國周邊有12國為潛在結盟對象.” http://news.ifeng.com/mainland/detail_2012_07/09/15880906_0.shtml. (2014년 3월 25일 검색)
- “中俄睦鄰友好合作條約.”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8/21/content_532202.htm. (2013년 5월 9일 검색)
- “上合組織不會成為軍事同盟組織.” http://news.ifeng.com/world/detail_2011_06/15/7028819_0.shtml. (2014년 4월 25일 검색)
- “中國為何不結盟，何時才會結盟?” <http://military.china.com/critical3/27/20110810/16697574.html>. (2014년 3월 27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4년 05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5월 19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6월 17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2 (2014)

A Consideration on Chinese Intellectuals' Discussions on Alliance

Eun-Jung Hong

(Ph.D. Candid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s nonalignment has been a foreign policy since her reformation and opening up, and it is still effective for now. However, with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changes, alliance has been fully discussed among Chinese intellectuals in recent years. This thesis deals with their discussions on alliance in three categories, namely, alliance, nonalignment and quasi-alliance. In the first category, I deal with the discussions on alliance, in which alliance is emphasized by questioning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nonalignment in the process of China's rise. In the second category, I deal with the discussions on nonalignment,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nonalignment is supported. In the third category, I deal with the discussions on quasi-alliance, which is neither alliances nor nonalignment and is a strategic thinking in connection with China's current diplomacy.

Alliance has been criticized or supported by Chinese intellectuals using various concept and analytical skills. In this way, the discussions on alliance have been expanded. In this respect, the discussions on alliance can diversity China's diplomatic options regardless of her foreign diplomacy. Although nonalignment has been a China's foreign policy for now, the discussions on alliance reflect the China's current diplomatic dilemma, and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Chinese

intellectuals' strategic thinking.

- Key Words: China's Rise, China's Nonalignment, Alliance, Quasi-Alliance, Partnership